

한일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뉴거버넌스*

정미애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일제 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
| 1. 문제제기 | IV. 과거청산을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노력 |
| 2. 이론적 준거틀로서의 뉴거버넌스 | 1.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 및 역사교과서 |
| 3. 연구목적 | 문제에 대한 대응 |
| II. 선행연구검토 | 2. 일제 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응 |
| III. 한일관계에서 청산되어야 할 과거와 그로 | V.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향하여 |
| 인한 현안 | 참고문헌 |
| 1.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 및 역사교과서 | Abstract |
| 문제 | |

Key words(중심용어): 한일관계(Korea-Japan Relation), 시민사회(Civil Society),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 새역모(Tsukurukai), 일본군위안부(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Comfort Women)

국 문 요 약

해방 이후 한국에게 일본은 준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청산의 대상에서 경제협력국으로, 그리고 다시 청산의 대상으로 재부상해 왔다. 본 연구는 일본이 여전히 우리의 ‘청산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미해결된 과거의 문제를 현재로 환원시켜 한일관계의 현안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시민사회에 주목한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국가 간의 외교상 관계 및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현안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갖는 이념지향성과 비공식성을 기반으로 형식과 제도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뉴거버넌스적 관점에 입각하여 시민사회를 한일관계의 주요 행위자로 설정하고 이들의 역할과 기능 여하에 따라 한일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본적 전제에서 출발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53-B00044).

한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 간에 제기되고 있는 갈등현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동과 그것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일 시민사회의 활동이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성공사례로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 두드러졌던 새역모의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과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자문제를 중심으로 그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한일관계의 갈등해소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한다.

I. 서론

1. 문제제기

해방과 더불어 한국에게 일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청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청산이 미흡한 채 냉전 상황 하에서 발발한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한반도의 분단으로 한국은 '반공'을 위한 극동의 최전선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에 따라 역사적 '청산의 대상'이었던 일본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현실적 상황 하에서 결탁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김영작 2006, 34-35).

해방 이후 공식적 한일관계의 출발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한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일국교정상화는 일본이 '청산의 대상'으로서보다 동맹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협정은 과거청산에 타협함으로써 이후의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갈등의 소지를 상당 부분 남겨놓았고, 그 문제들은 국교정상화 이후 4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청산해야 할 과거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풀어야 하는 숙제를 던지고 있다.

과거청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2004년 11월 10일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약칭 진상규명위)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발족되었고,¹⁾ 2005년 5월 31일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약칭 반민규명위)가 대통령 소속기구로 발족되었다. 한편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2005년 8월 29일에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공동으로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을 전개했다. 두 단체는 2005년 8월 29일 3,090명의 친일명단을 발표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제 하 과거청산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한일관계의 현안은 역사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다.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정상회담의 정례화(셔틀외교), 한일FTA, ASEAN+3(한·중·일)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 논의, 6자회담 등을 통한 안보협력, 지자체의 자매도시 맺기, 학술·문화교류 등 중앙정부 레벨에서 지자체, 시민사회 레벨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다방면으로 한일 간의

1) 현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로 변경. 존속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나 국회동의 시 6개월 2회 연장 가능.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국에 대한 감정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식민지 지배의 피해국인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반일감정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교류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한일관계의 근본적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정치적, 경제적, 인적 교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와 관련된 현안이 나올 때마다 한일 간에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본고는 한일 양국 간의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민족주의의 테두리를 넘은 역사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한일관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갈등해결의 주요행위자로서의 NGO에 주목한다. 이제 NGO는 국내정치는 물론이고 국제정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일본이 여전히 우리의 ‘청산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미해결된 과거의 문제를 현재로 환원시켜 한일관계의 현안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국가간의 외교상 관계 및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현안에 있어서도 시민사회가 갖는 이념지향성과 비공식성을 기반으로 형식과 제도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일본에서 시마네현(島根縣) 의회가 2005년 2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에 항의하여 마산시의회가 4월 6일에 ‘대마도의 날’ 조례를 공포하여 갈등을 증폭시킨 반면, 시마네·돗토리(鳥取) 두 현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들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일본이 한반도를 무력병합,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선언된 영유에 정당성은 없다”고 지적하고,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하는 것은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진정한 일한·한일 우호의 길을 일본 측에서 시마네현이 선두에 서서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조례 철회를 요청하는 문서를 4월 28일 시마네현에 제출했다.(『讀賣新聞』, 2005년 4월 29일)

필자는 이하의 본문을 통해 1945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게 일본은 어떤 존재이었나를 자문하면서 한일관계의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준거틀로서의 뉴거버넌스

본고는 이론적 준거틀로서 뉴거버넌스론을 채택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시민사회를 국가(정부) 혹은 국가·시장에 대한 대항체로서 인식하는 이분법적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의 다원주의화, 글로벌화와 더불어 NGO는 국내외적으로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행위주체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 정부의 일원적 통치(government)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조정양식을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이 등장했다.

뉴거버넌스 개념은 종래의 거버넌스 개념을 시민사회의 역할증대와 더불어 더욱 발전시킨 개념으로 현대사회를 분석하는 데 주요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거버넌스가 국가중심, 시장중심의 사회운영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등장한 것인데 비해, 뉴거버넌스는 거버넌스에

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civil society-centered governance) 이론이다(김석준 2000; 김영래 2006).

뉴거버넌스는 ‘제3자 정부’(the third government) 이론을 제시했던 샬러먼(Salamon 2002) 등에 의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종래의 거버넌스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샬러먼은 뉴거버넌스는 공공행위의 도구(the tools of public action)로서 단순한 정부의 규모와 범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 형태의 변환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문제에 대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뉴거버넌스 이론은 특히 참여,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중심요소로 한다.

뉴거버넌스의 관점은 기존의 한일관계 분석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정부일변도의 시각, 국민국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한일관계의 실재를 새롭게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일 시민사회의 활동에 있어서도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3. 연구목적

뉴거버넌스적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시민사회를 한일관계의 주요 행위자로 설정하고 이들의 역할과 기능 여하에 따라 한일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본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일본 정부가 표면적인 반성과 사죄로 일관하고, 한국 정부가 과거청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데 비해 양국 시민사회는 과거청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실제로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정부보다 앞선 역사인식과 시민의식으로 과거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일본군위안부²⁾ 문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역사

2) 1990년대 이전에는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 대신 정신대(挺身隊)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정신(挺身)이란 ‘어떤 목적을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친다’는 뜻으로 정신대는 ‘일본국(=천황)을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이다. 정신대는 일제가 전쟁을 위해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남녀 모두 정신대의 동원 대상이었고 농촌정신대, 보도(報道)정신대, 의료정신대, 근로정신대 등 여러 분야에서 조직되었다. 여성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여자정신대로, 공식적으로 여자정신대로 명칭이 발표된 것은 1944년 8월 22일이지만, 그 이전부터 조선의 여성들은 이미 관 알선으로 정신대로 동원되었고, 정신대로 동원된 여성들 중 일부는 일본군위안소로 강제연행되었다.

현재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중군위안부’는 위안부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인데, 중군이라는 말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관계법령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고 쓰고 있다. 위안부란 말은 전적으로 일본군의 입장을 반영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당시 군문서에 위안부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 일본정부와 군의 관여사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면서 이들 피해자들을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로 새롭게 개념화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라는 말은 이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국제적인 용어로서 시민권을 얻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정부의 표현을 인용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표현을 따라 ‘중군위안부’라고 적지만, 그 외에는 ‘일본군위안부’라고 기술한다.

교과서 채택저지 및 공동교재 개발 등의 노력은 양국 시민사회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간에 제기되고 있는 갈등현안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활동과 그것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한일 시민사회의 활동이 한일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성공사례로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 두드러졌던 새역모의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과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자문제를 중심으로 그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한일관계의 갈등 해소를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한다.

II. 선행연구검토

한일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한일관계의 일원적 행위자로서의 ‘정부’에 초점을 맞춰왔다. (우즈미 아이코 1997; 이원덕 1996) 적어도 한국과 일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는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구조적인 변수보다 정부의 역할과 정권 변화가 더 중요하게 작용해왔다는 관점이 설득력을 얻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김호섭(2009)은 한일관계의 내용을 규정하는 변수에는 구조적인 변수와 정치지도자 변수가 있는데, 한일관계는 정치체제나 민주주의 가치와 같은 구조적인 변수보다는 실제로 정치현상을 주도하는 행위자인 정치리더십의 성향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그 사례로 ①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小淵惠三) 수상의 한일파트너십 선언, ②고이즈미(小泉純一郎)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③아베(安倍晋三) 수상과 후쿠다(福田康夫) 수상의 과거사 인식,³⁾ ④노무현 대통령의 대일 외교전 선포를 들어 한일 양국의 국내 정권변화에 의해서 한일관계가 대립적 혹은 우호적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다.

과거청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지만, 이를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나마 소개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는 신주백(2005), 이상봉(2006), 김창록(2007a, 2007b), 유영국(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부문운동의 차원에서 이상봉은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중심으로 재일한인의 전후보상운동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연대의 특징에 주목하고 있고, 유영국은 일본의 마지막 강제징용 조선인 부락인 우토로 강제철거에 대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김창록은 과거청산과 관련한 한국에서의 소송(2007a)과 일본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2007b)을 시기에 따라 각 사례별로 고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 특히 2000년대의 소송 - 이 한일 간의 과거청산에 관한 한국 국내의 여론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관련문서의 전면공개, 진상규명 진전, 정부의 조약 해석 개선이라는 일정한 성과를 이끌어낸 반면, 일본에서의 소송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조치 외에는

3) 김호섭은 아베 수상이 “종군위안부”에서 ‘협회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대한(對韓) 강경노선을 펼친 반면, 후쿠다 수상은 평화헌법을 존중하고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피해를 본 주변국가의 국민감정을 존중하는 외교를 펼치는 한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명언한 것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기에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반면, 후쿠다 내각기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일본기업의 책임은 물론이고 일본정부의 책임문제에 대한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일정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호소를 이어온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및 변호사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김창록 2007a, 156)라고 평가함으로써 한일과거청산에서 시민단체가 매우 중요한 행위자임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가 부문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신주백은 대일 과거청산운동의 역사를 운동의 특징에 따라 잠복기→태동기→본격화·세분화→네트워크화의 시기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편 한일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박철휘(2008)는 탈냉전기 새로운 국가정체성 모색과정에서 한일갈등의 쟁점화 구조가 변화되는 양상과 이것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한국에서의 국가정체성 재규정이 한일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울러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을 함께 제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본의 우익 민족주의자들과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한일 양국의 근본주의적 시민사회운동이 한일관계의 의제(agenda) 설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일관계와 과거청산이라는 주제에 관한 종래의 정부중심적 연구, 한국 혹은 일본에서 전개된 소송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국가간 관계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뉴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이 주제를 풀어보고자 한다.

Ⅲ. 한일관계에서 청산되어야 할 과거와 그로 인한 현안

한일회담의 외교문서가 공개된 2005년 8월 한국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타결된 협정은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므로 재협상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결국 이는 한국국민이 일본에게 요구하고 있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이미 국가간에는 해결이 끝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일 간 갈등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미해결로 남은 도덕적 책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양국의 시민세력이 아닐까?

이하에서는 한일 갈등현안들 중 한일관계의 미래비전 모색을 위한 과거청산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현안들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후술하겠지만, 정부보다 앞선 역사인식과 시민의식으로 시민사회 레벨에서 과거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되어 온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비전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 및 역사교과서 문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일본사회의 보수우경화의 경향이 가시화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항한 반대도 점차 구체성을 띠고 전개되어 왔다. 2001년부터 계속된 고이즈미 수상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같은 2001년부터 4년마다 되풀이되는 새역모의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및 교과서 채택과 관련된 문제들,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이후 점차 빈도가 잦아지고 강해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조용해질만하면 터져나오는 현안들로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오늘의 한일관계다.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한일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주를 이루었으나, 기대와 달리 교과서문제와 독도문제는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실린 교과서가 얼마나 검정을 통과했으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나마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전면에 대두되는 일이 없어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정도다.

2001년 새역모의 역사교과서 검정통과를 시작으로 촉발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에 대한 결과가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관계로 4년마다 발생하는 현안으로 정례화 되어버린 측면이 있다. 특히 2011년에는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지원과 모금운동이 한참 전개되어 해방 이후 일본에 대한 우호 분위기가 가장 고조되고 있던 때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3월 30일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을 도와야한다는 공감대가 일시에 반일감정으로 바뀌기도 했다.

일본의 교과서제도는 민간의 교과서 발행자에 의한 교과서 저작·편집이 기본이다. 그러나 교과서 발행자는 학습지도요령⁴⁾ 및 교과용 도서검정기준 등을 기준으로 교과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의 내용은 물론이고 가격과 분량 등의 범위까지도 제시한다. 발행자가 검정을 신청하면 문부과학성 내 교과서조사관의 조사에 부처지고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인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에 의해 체크된다. 문부과학대신은 심의회의 답신을 바탕으로 검정을 하게 된다. 검정이 끝난 도서 중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결정(=채택)하게 되는데, 채택권한은 공립학교의 경우는 채택구역의 소관 교육위원회에, 국립·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장에게 있다. 교과서 검정은 4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그림 1>은 교과서 검정제도를 통해 교과서가 사용되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4)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이란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8년 7월 14일 중학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일 간 교과서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표 1> 일본의 교과서 검정·채택·사용의 주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학교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
중학교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고등학교	1학년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2학년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3학년	검정			◎		◎	
		채택				△		△
		사용개시	○					

주: 1. ◎ : 검정년도

△ : 전년도 검정에서 합격한 교과서에 대해 처음으로 채택이 이루어지는 연도

○ : 사용개시년도(소·중학교는 원칙적으로 4년마다, 고등학교는 매년 채택 변경)

2. 굵은 선 이후는 학습지도요령 개정후의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교과서에 관한 것임.

소학교 학습지도요령(2008년 문부과학성 고시) : 2011년도부터 전면실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2008년 문부과학성 고시) : 2012년도부터 전면실시에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2009년 문부과학성 고시) : 2013년도부터 학년진행에 따라 실시예정

- 자료 출처 : 文部科學省(http://www.mext.go.jp/a_menu/shotou/kyoukasho/kentei/1304386.htm) 2011년 7월 10일 검색

우익에 의한 '3차 교과서 공격'은 1993년 '55년체제' 붕괴 이후의 정치권의 변화에 의해 시작되었다. 비자민연립정권이 출범한 후 호소카와(細川護熙) 수상이 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1994년 자사사 연립정권에서 사회당 위원장인 무라야마(村山富市)가 수상에 취임, 1995년 8월 15일 전후50주년기념식전에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하자 우익의 위기감은 고조되었다. 더욱이 1994년 이후 문부과학성이 검정을 완화하고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1994년부터 고교, 1996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대부분이 중군위안부에 대해 기술했다.

1995년 1월 '자학사관'을 비판하며 자유주의사관을 역설해 온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가 '자유주의사관연구회'를 결성한 데 이어, 1996년 12월에는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등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결성했다. 새역모는 1999년 2월에 가나카와현에 전국 최초로 지부가 설립된 후 47개의 모든 시도부현에 지부가 설립되어 전국적 조직이 되었다. 새역모는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에 압력을 효과적으로 가하기 위해 각종 우익조직들을 결집시켜 2000년 4월에는 ‘교과서 개선연락협의회’를 발족시켰고, 자민당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과서의원연맹’을 조직했다.⁷⁾

새역모는 2001년 『새로운 역사교과서』(扶桑社)를 출판하고 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광범한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존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감행했다. 우파의 이러한 공격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2002년 이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중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거의 사라졌다.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는 2001년 0.039%, 2005년 0.39%, 2009년 1.67%의 매우 낮은 채택률에 머물렀다.

새역모는 낮은 채택율에 대한 원인 진단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내분으로 결국 두 개의 세력으로 분열되었다.⁸⁾ 후지오카를 비롯한 새역모는 자유사(自由社)라는 출판사와 함께 교과서를 만들어 2009년, 2011년에 중학교 역사·공민교과서가 모두 검정을 통과했다. 한편 새역모에서 탈퇴해서 나온 ‘교과서개선모임’은 후소샤(扶桑社)의 자회사인 이쿠호사(育鵬社)를 설립하여 2011년에 중학교 역사·공민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결과적으로 새역모의 내분으로 인해 수정주의 역사관에 근거한 왜곡된 역사·공민교과서가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2011년도 교과서 채택현장은 채택과 저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일제 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일제 하 강제동원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의 제정·공포 이후 1945년 패전에 이르는 시기에 일본당국이 전쟁수행을 위해 조선인에 대해 시행한 동원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 1931년 만주사변을 필두로 본격적인 대륙침략을 시작한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개시 이후 전면적인 국가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 공급을 위해서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이 법은 동년 5월 5일부터 조선에 적용되었다. 강제연행(강제동원)은 노동력동원과 병력동원, 준병력동원, 여성동원으로 대별되며, 그 외 학생동원과 조선농업보국청년대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해자 수에 비해 볼 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개인 또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법상 시효가 지났다거나 개인은 국제법상 소송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패소했다.

한국정부가 2004년 3월 5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2005

7) 새역모에 대한 상세는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http://www.tsukurukai.com>) 참조.

8) 새역모의 내분과 갈등에 대해서는 俵義文(2008), 『‘つくる會’分裂と歴史偽造の深層』, 花伝社 참조.

년 2월 1일부터 피해접수를 시작한 이래 <표 2>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4월 현재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신고인 수만도 201,984명에 달하고, 그중 심의 결과 피해를 인정받은 건수는 198,258건에 이른다.⁹⁾

<표 2> 강제동원 피해신고 심의·결과 현황

(2011년 4월)

구분	결과 건수	결정구분				성별		동원유형				
		피해인정	각하	기각	불능	남자	여자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
총계	201,984	198,258	110	603	3,013	197,299	959	31,777	34,151	132,294	22	14

- 자료 출처 : <http://www.jiwon.go.kr> 2011년 7월 5일 검색

강제동원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우선 노동력 동원은 현재 조사단체가 각종 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산출한 동원수는 700만 명(국내 500만 명, 국외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조선인의 군사력동원은 계속 급기시 되어오다 침략전쟁의 확대와 이로 인한 병력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37년 조선군사령부는 “조선인에게 황국의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또한 장래의 병역문제해결을 위한 시험적인 제도로써 조선인 장정을 지원에 의해 현역에 복무시키는 제도의 실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제조건으로서 몇 가지 조항을 단서로 내걸었다. 첫째는 의무교육이고, 두 번째는 정신교육이다. 이 가운데 후자에 비중을 두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구비되는 시점으로 설정한 기간은 50년 정도였다. 당초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실시시기를 50년 후로 잡고 있었던 일본 군부는 병력부족현상을 해소할 마지막 방법으로 1942년에는 징병제 실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시기는 1944년으로 설정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1943년 3월 1일에 징병제 실시를 위한 병역법을 개정했고(8월 1일부터 시행), 1944년 4월부터는 징병신체검사가 실시되었다.

세 번째로 준병력동원이다. 일본 군부는 군속(軍屬)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노무동원력으로 조선인을 동원했다. 현재 학계와 조사단체에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365,000명의 군속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1944년 이후에는 노동력동원과 별다른 구별 없이 동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네 번째 피해유형으로서 여성동원은 근로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로 대별된다. 전자는 노동동원이고 후자는 성적 착취이다. 근로정신대는 법적으로 1944년 8월 일본에서 여자근로정신령이 공포되고, 이 법령이 조선에 적용됨으로써 성립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루어져왔던 것을 뒤늦게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포되었던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동원은 강제동원의 역

9) 국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른 지원금 결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 사망·행불 위로금 : 1인당 2천만원
- 미수금피해 지원금 :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
- 부상장해 위로금 : 1인당 2천만원에서 3백만원
- 생존자 의료지원금 : 1인당 매년 80만원

사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행해졌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침략전쟁을 전개하기 이전부터 일본군이 파견되는 지역에는 일본군위안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1932년에 상하이(上海)에 육군위안소가 개설된 시점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본군위안부는 일본의 화류업계와 군부, 당국이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므로 현재까지도 일본 당국이 책임론을 수용하지 않는 근거가 되고 있다. 동원방법으로는 1930년대에 직업 알선, 1940년대부터 강제연행이 행해졌다. 동원의 주체는 군인·군속·경찰·업자 등 다양하다. 여성동원의 경우에는 정확한 동원자의 수나 피해자의 수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약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총 234명이며 그중 2011년 현재 생존자는 75명이다. 생존자의 평균연령은 86세로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조속한 해결과 보상이 이루어야 할 것이다.

<표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명)

계	생존			사망
	소계	국내	국외	
234	75	67	8	159

<표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연령별 현황

(2011년 1월 만 나이 기준)

계	77~79세	80~84세	85~89세	90세 이상	평균연령
75	4	25	35	11	86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4_01_01.jsp)
2011년 7월 15일 검색

IV. 과거청산을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노력

한일 시민사회의 교류·협력은 1972년 손진두 재판을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손진두는 일본으로 밀입국했다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원폭피해자로서 한국에서는 원폭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에 밀입국한 것이라는 사실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면서 그를 돕기 위한 운동이 벌어졌다. 이는 한국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70년대는 결사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유족회’가 결성되어 원폭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 한일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는 민주화되지 않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1980년대에 접어들어 활동을 지원했던 일본 내 세력들이 지속되지 못함으로써 활동이 주춤하다가, 1990년대 초 故 김학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에 과거사 관련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양국 시민사회의 연대가 형성·발전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제 과거청산을 위한 한일 시민사회의 교류·협력의 성과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및 생활지원에서부터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위한 집회, 직접적인 피해지역 방문, 공동역사부교재개발 등 연대의 폭이 넓어지고, 방식도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거 일제가 저지른 전쟁피해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피해문제와 성매매, 여성인권의 문제로 확대되어 ‘과거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로 인식되게 만든 것이다.

세 번째는 한일 시민단체의 활동은 아시아 피해국 시민단체들의 연대를 이끌어내었다는 것이다. 한일 시민단체의 일제 과거청산을 위한 활동들은 아시아지역의 피해자와 시민단체들 간 네트워크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일 시민단체의 네트워크가 보다 긴밀해졌다고 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한일 시민사회의 활동과 연대가 두드러졌던 새역모의 역사교과서와 일제 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중심으로 그 활동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 및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

일본 정부가 표면적인 반성과 사죄로 일관하고, 한국 정부가 과거청산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데 비해 양국 시민사회는 과거청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일본의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이하 ‘교과서네트21’)는 새역모 역사교과서 채택저지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교과서네트21은 이에나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결성되었던 ‘교과서소송을 지원하는 전국연락회’가 1997년 8월 최고재판소 판결과 더불어 지원투쟁을 종료·해산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1998년 6월 13일 결성된 단체이다. 교과서네트21은 새역모의 역사교과서 채택저지운동을 비롯하여 교육기본법 개정 반대운동, 평화헌법 수호 등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진보적 사회운동 단체의 네트워크 통합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현재 교과서네트21의 멤버는 62단체에 이르는데, 이들은 하나의 중앙과 61개 지부로 이루어져 같은 목표 아래 동일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네트21과 뜻을 같이하는 62개의 개별적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린이와 교육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이어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함께 행동한다.¹⁰⁾

교과서네트21은 2001년 4월 새역모의 역사교과서가 문부과학성의 검정에 합격하자 새역모 교과서의 내용을 일본인들이 안다면 틀림없이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어린이들에게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를 넘겨주지 않기 위한 불체

10) 子どもと教科書全國ネット21(<http://www.net.jp/asahi/kyokasho/net21>).

택운동의 선두에 섰다. 2001년 도치기현(栃木縣) 시모쓰가(下都賀) 지구의 경우, 채택을 결정했다가 불채택운동의 영향으로 채택을 철회하기도 했다.

교과서네트21은 새역모 교과서의 채택 저지를 위해 구체적인 활동방침을 제안하면서 특히 지역에서부터 새역모 교과서 반대여론을 형성·확대하는 활동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2001년 6월 10일, 11일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북한이 참여하는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시아연대긴급회의’를 도쿄에서 개최했다.

한편 2001년의 새역모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에는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활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최대의 격전지 도쿄에서는 거의 모든 채택지구의 시민조직, 교직원조합이 참가하여 ‘새역모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는 도쿄네트’가 만들어졌다. 또한 2001년 새역모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의 선두에 섰던 도쿄도 스기나미구(杉並區)의 ‘새역모의 교과서채택에 반대하는 스기나미 부모회11)’는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최종 채택권한을 가진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2005년 7월 1일 새역모의 역사·공민교과서의 채택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는 일본 시민단체가 교과서 채택과 관련하여 법원에 사법적 판단을 구한 최초의 사례이다.¹²⁾ 이러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2005년 새역모의 역사교과서 채택률을 0.39%에 그치게 하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다.

일본에서 새역모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의 중심에 교과서네트21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이하 ‘아시아역사연대’)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역사교육연대는 2001년 일본 교과서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범아시아행동의날’과 한일공동시위를 개최하는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 산케이신문, 후쇼사 등 일본의 대표적인 기관에 대한 사이버 시위,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다. 한편 연대활동으로써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연대긴급회의에 참가했고, 73개국 125개 도시에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을 개최했으며, 일본 도쿄에서 약 500여명이 문부과학성에서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2005년에는 200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①민관정 네트워크 형성, ②일본캠페인, ③국내캠페인, ④국제캠페인 등 국내외, 민관정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활동이 이루어졌다.¹³⁾

일본 각지에서 전개된 새역모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의 성공은 일본 시민운동의 향후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과서운동이 교사와 학자들의 영역이라는 편견을 깨고, 일반 시민, 더욱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운동의 주체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교직원노조, 노동조합, 시민단체가 하나의 이슈를 중심으로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

11) 「つくる會」の教科書採擇に反對する杉並・親の會(<http://www16.plala.or.jp/kyoukasyo>).

12) 스기나미구는 ‘새역모의 교과서채택에 반대하는 스기나미 부모회’ 외에도 ‘스기나미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두의 모임(杉並の教育を考えるみんなの會)’, ‘스기나미의 부당한 교과서 채택 취소 재판모임(杉並の不当な教科書採擇取り消し裁判の會)’ 등 우익교과서 채택을 저지·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이들 단체들은 새역모의 역사·공민교과서 채택취소 재판 외에도 2007년 9월 21일에는 도쿄도 주민 245명으로 원고단을 구성, 2006년에 개정된 현행의 교육기본법은 애국심을 강요하여 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쿄 지방재판소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3)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의 구체적 활동내용은 홈페이지(<http://yespeace.tistory.com>) 참조.

여 운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고, 결과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 사회에서 출발한 시민의 자발적 불채택 운동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일본을 넘어 국제적 연대로 확대됨으로써 글로벌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실천력과 저변확대는 보수적이고 지역적이며 운동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 시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새역모의 역사교과서 등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새역모는 역사인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역사인식의 문제를 연구의 영역이 아닌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이끌어냈다. 또한 시민운동이 한일, 한중일 시민연대로 확장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2011년 교과서 채택 국면에서 한일의 시민사회는 다시 한 번 일본의 우익들과 격전을 치러야 한다.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새역모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단체들은 이제 새역모의 자유사관 교과서와 교과서개선모임의 이쿠호사관 교과서를 상대로 해야 하는 만큼 이전보다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이번에도 시민단체들은 교과서네트21을 중심으로 일본내 42개 단체와 한국의 아시아역사연대가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된 2011년 3월 30일 “역사왜곡·침략전쟁을 긍정하고 헌법을 적시(敵視), 아시아인과의 공생을 부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화의 길을 걷는 ‘부적절한 교과서’를 어린이들에게 건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의 채택저지를 위해 연대하여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표 5> 일본 우익 역사교과서 채택반대운동단체

아시아여성자료센터 / 「위안부」 문제해결 올(all) 연대 네트워크 / 역사과학협의회 / ABC기획위원회 / 오에(大江) · 이와나미(岩波) 오키나와전 재판을 지원하여 오키나와의 진실을 알리는 수도권 모임 / 오키나와전의 역사왜곡을 용서하지 않고, 오키나와로부터 평화교육을 추진하는 모임 / 오키나와 평화네트워크 / 오키나와 평화네트워크 수도권 모임 /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오키나와전 재판지원연락회 /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 / 「학교에 자유의 바람을!」 네트워크 / 교과서 · 시민포럼 / 헌법을 살리는 모임 / 헌법 · 1947년 교육기본법을 살리는 전국네트워크 / 어린이와 교과서전국네트21 / 어린이의 권리 · 교육 · 문화 전국센터 / 「어린이는 나라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시민연락회 / 스가하라(相模原)의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 젠더평등사회를 위한 네트워크 / 사회과 교과서간담회 / 자유사관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요코하마시 8구 시민연락회 / 자유법조단 / 스기나미(杉並)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두의 모임 / 「전쟁과 여성에의 폭력」 일본네트워크 / 「새역모」 교과서채택을 저지하는 도쿄네트워크 / 중학역사교과서에 「위안부」 기술의 부활을 요구하는 시민연락회 / 남녀평등을 추진하는 교육전국네트워크 / 중국인전쟁피해자의 요구를 지지하는 모임 / 지리교육연구회 / 도쿄역사과학연구회 / 난징사건 · 오키나와문제 합동연구회 / 난징에의 길 · 사실(史實)을 지키는 모임 / 한중일 3국 공동역사교재위원회 / 일본출판노동조합연합회 /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 / 열린 역사교육 모임 / 피스보트 / 용서하지마! 헌법개악 · 시민연락회 / 요코하마 교과서채택연락회 / 역사학연구회 / 역사교육자협의회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의 평화」 포럼 일본실행위원회(이상 일본측 42단체)

한국측: 아시아의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11년 7월 10일 검색.

<표 5>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사회가 ‘보수우경화’로 단정짓고 있는 일본사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른바 ‘양심적’ 시민세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익 교과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아시아역사연대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박유하(2005, 18-25)는 한국에서 어떤 문제든 늘 ‘반성 없는 일본’으로 이어지기 쉬웠던 것은 일본 우파들의 발언과 행동에 의한 것으로 전후 일본에 대해 비판하는 ‘양심적 지식인’들과 시민들을 보면서 ‘반성 없는 일본’이라는 대전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 또한 졸고(2008)를 통해 보수우경화로 특징되는 현재의 일본사회에 실은 다양한 시민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21세기 일본사회의 방향성을 두고 치열한 대립구도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밝히면서 한국에서(특히 한국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이 보수우경화라는 단일적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일원적인 사회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함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표 5>를 보면 요코하마(横浜)의 2개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요코하마는 전국 최대의 교과서 시장인 동시에 일본 우익교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일본 우익들이 이 지역에 집중하는 이유는 2009년 요코하마의 8개 지역에서 지유샤를 채택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채택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 6명 중 4명이 지유샤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에 요코하마는 18개 채택구가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관내 76,000명이 사용하는 교과서가 한꺼번에 채택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 우익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한 차례 채택된 바 있고, 2011년에 다시 채택된다면 2% 정도의 채택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시민단체인 ‘요코하마 교과서채택연락회’(이하 요코하마연락회)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요코하마연락회는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의 불투명한 교과서 채택을 투명하게 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11년 6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한편 요코하마연락회는 한국의 시민단체인 아시아역사연대와 연대해 한일 양국 요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시아역사연대는 지난 3월 방일 활동을 통해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 요청 활동을 전개했다. 7월 5일에는 요코하마연락회 회원이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의회를 방문해 우익교과서가 요코하마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요청서를 보내줄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 인천시의회는 역사왜곡 결의안을 7월 7일 채택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명의로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프레스시안』, 2011년 7월 7일)

2. 일제 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응

일제 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배상을 목표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80년대 말 당시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가 공식적

인 문제제기를 한 것을 계기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교회연)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교회연 산하 연구위원회만으로 한계가 있어 타 단체들 간의 더욱 폭넓은 연대활동의 요청과 더불어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만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1990년 7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을 전개하는 한국정신대연구소(이하 정신대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연구조사만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신고와 교육활동, 대일·대정부활동에 한계가 드러나 1990년 11월에 정대협이 설립되었다.

정대협은 정신대연구소와 연계하여 진상조사를 시작했으며, ‘정신대신고전화’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증언을 녹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제도에 대한 실상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위안부 문제를 국민에게 홍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宮澤喜一) 전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의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회 앞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날의 시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2011년 7월 13일 시위는 978차에 해당한다.

정대협, 정신대연구소의 설립에 이어 나눔의집,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정신대문제대책추진협의회, 경남지역 정신대할머니를 위한 시민연대 등이 차례로 생겨났다. 한편 국내에서 시작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은 국제NGO들의 도움으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기에 이르렀으며, 대만,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피해국과 미주, 유럽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이 창립되기에 이르렀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는 단체들은 <표 6>과 같다. <표 6>에서도 상기의 <표 5>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양심적’ 시민세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지역	단체명
한국	KNCC 양성평등위원회/감리교여교역자회/감리교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독교민회/기장여신도회전국연합회/여성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예장전국여교역자연합회/이화민주동우회/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정신대연구소/세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사수도회장상연합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
	나눔의 집/나와 우리/다시다함께/독도수호대/독립기념관/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일제강점하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전국역사교사모임/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한국성폭력상담소/인천여성민우회/반미여성회/평화박물관/민주노동당여성

	위원회/한국노총/민주노총 여성위원회/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UN인권정책센터
일본	여성들의전쟁과평화자료관 마쓰시로대본영위안소를살리는모임 전쟁과여성폭력일본네트워크(VAWW-NET JAPAN) 아시아여성자료센터 시모노세키관결을살리는모임 관부재판을지원하는모임 헌법9조 세계미래연락회
피해국	대만'위안부'소송지원모임 타이페이시 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함께 하는 호주친구들
미주	워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 ALPHA(캐나다 Association for Learning &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

- 자료 출처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menu_016.php) 2011년 7월 10일 검색

정대협을 비롯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들은 한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1992년 8월 피해자들의 네트워크인 '아시아연대회의'를 시작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증언이나 연구활동을 비롯하여 유엔인권이사회·인권소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기구에도 문제의 해결을 호소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의 피해자들도 일본의 피해자들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전개하였다. 입법활동의 성과는 2002년에 '진지하 성적강제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촉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되기에 이르렀으며, 아시아 피해국의 국회에서도 국회의 동의안을 결의하거나 지지나 연대를 호소하는 성명들이 제출되었다.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는 2007년에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House Resolution 121)이 일본정부의 강한 로비활동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¹⁴⁾ 이외에도 네덜란드(2007년 11월 8일), 캐나다(2007년 11월 28일), EU(2007년 12월 13일), 필리핀(2008년 3월 11일)에서도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자는 취지"로 1995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약칭 '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되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피해자

14) 위안부관련결의안은 1997년 민주당의 리핀스키(William O. Lipinski)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다. 2000년부터 에반스(Lane Evans) 의원이 다섯 번에 걸쳐 제출하여 2006년에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나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을 2007년에 마이클 혼다(Michael Honda) 의원이 다시 상정하여 통과된 것이다(조양현 2007, 113-121).

들에게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와 보상금(한국, 대만에서는 300만 엔 상당, 필리핀에서는 120만 엔 상당의 의료복지 지원금과 기금으로부터 보상금 200만 엔)을 전달하고자 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엄밀하게는 ‘사적’ 단체이지만, 1993년에 미야자와 내각이 설립을 약속했고, 1995년에 무라야마 내각에서 설립되어 사무국의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의 예산을 정부가 지출하고 있으므로 ‘공적’ 활동이라고 설명한다(와다 하루키 외 2001, 7-8). 따라서 “보상금은 민간인 또는 개인적 차원이라기보다 일본을 구성하는 공적 존재로서의 일본 국민의 속죄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피해국과 피해자들은 정체불분명한 ‘차선택’으로서의 아시아여성기금을 거부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 및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7명이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보상금 수령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다. 1998년 5월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한국정부로부터의 생활지원금 3,150만원과 정대협이 1996년 10월부터 모금운동으로 모은 418만원이 지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아시아여성기금으로부터의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고, 아시아여성기금으로부터 이미 보상금을 받은 7명과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4명은 생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¹⁵⁾ 결국 아시아여성기금은 사회적 논란만 남긴 채 2002년 5월 1일로 한국에서의 사업을 종료했다. 한국에서의 실패에 대해 아시아여성기금의 발기인이며 이사로 활동했던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실패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하면서, 특히 한국에서의 실패는 기금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강경한 대립축을 갖는 사회문제·정치문제로 만들어버린 한일 양국 미디어의 선동적이고 일면적인 보도태도, 전후 일관되게 한국사회의 저류를 형성해온 반일 내셔널리즘, 소극적인 한일 양국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오누마 야스아키 2007).

한국에서 논란만 일으킨 아시아여성기금과 달리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일본후원회’(이하 ‘후원회’)는 일본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주목할 만하다. 후원회는 나눔의집 내의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을 지원하는 일본의 자발적인 시민단체로서, 1997년 8월 31일 한국에서 발족된 ‘일본군위안부 기념관(가칭)’ 설립을 위한 시민준비위원회에 호응하는 형식으로 1997년 11월 13일 일본에서 ‘일본군위안부 기념관(가칭) 설립후원회’로 출발했다. 발기인 61명, 사무국 13명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래 발기인 61명을 연명으로 한 ‘일본군위안부 기념관’ 설립을 위한 후원회 호소문을 일본 전역에 발송, 모금운동을 전개해 1998년 8월 개관까지 500여 명의 후원금 600백만 엔을 나눔의집에 전달했다. 1998년 2월에는 해진 스님이 쓴 『나, 내일 데모간테이』의 일본어판 『나눔의집 할머니들(ナヌムの家のハルモニたち)』(정가 2400엔)을 출판, 일본 전국의 시민단체를 통한 판매로 112만 엔의 후원금 조성, 1999년 120만 엔, 2000년에 100만 엔을 나눔의집에 전달했다. 1999년 12월부터 회원제로 운영(유지회원 연 1만 엔, 협력회원 5천 엔, 단체 1만 엔)하고 있는데, 2010년 현재 회원은 337명이다. 2003년부터는 회원 중 한 명이 나눔의집에 상주하면서 일본인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¹⁶⁾

15)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http://www.awf.or.jp/3/korea.html>) 2011년 7월 15일 검색.

16) ナヌムの家「歴史館」後援會(<http://kyoto.cool.ne.jp/nanum>) 2011년 6월 30일부터 홈페이지 폐쇄. 현재는 ナヌムの家/日本軍慰安婦歴史館を応援するページ(www.geocities.co.jp/SilkRoad-Ocean/3716/)만 운영.

한편 일본군위안부 문제 외에 강제징용 등의 노동력 동원 및 병력동원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표 7>에 제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일본에서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표 7>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지역분류	단체명
도쿄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전국조직), 일본부인회, 바우넷재팬, 강제연행네트워크, 전후보상네트워크, 인권을위한일본노동자연합, 전후보상실현 한일 시민단체, 전후보상실현 시민기금 대표, 여성전쟁평화인권학회, JAPAN ALLA, 국제인권활동일본위원회, 한국원폭피해자구원모임, 국제인권활동일본위원회, 후지코시근로정신대소송단, 피스보트 등
그 외 지역	시즈오카의 조선인 강제연행을 조사하는 모임, 도치기부락해방동맹, 강제연행·강제노동희생자를생각하는홋카이도포럼 등

- 자료 출처 :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서울대회 자료집 2004)

2003년에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등 8개국에 위원회를 두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태평양전쟁 보상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의체로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이하 ‘국제연대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이후 서울대회, 평양대회 등을 거쳐 2011년에는 5월 13일 중국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일본의 과거청산과 교과서·문화재 문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겸 워크숍을 열고 일본 과거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동아일보』, 2011년 5월 14일).

한편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구자, 활동가들이 일제시기 강제연행된 조선인 희생자 및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 7월 18일 도쿄에서 연대조직인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이하 ‘진상규명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진상규명네트워크는 일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강제동원 실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조직을 결성한 첫 사례로, 강제동원에 관한 자료 수집활동과 일본 정부나 공적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강제동원 관련 자료의 공개 요구 및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조사를 위한 법률제정 활동 등을 통해 일제하 강제동원 진상조사 및 규명활동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¹⁷⁾

V.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향하여

본고에서는 뉴거버넌스적 관점에 입각하여 시민사회를 한일관계의 주요행위자로 설정하고, 한일 시민사회의 활동이 한일 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한 성공사례로써 새역모의 역사교과서 채택저

17)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http://www.ksyc.jp/sinsou-net/>).

지·반대운동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문제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는 한일 간에 문제가 되기 이전부터 일본 내부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부터 보수와 진보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어 온 문제이다. 일본의 진보적 양심세력은 보수우익세력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에 맞서 꾸준히 활동을 전개해왔다. 일본 시민사회는 새역모의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2001년 이후부터는 새역모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고,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는 2001년 0.039%, 2005년 0.39%, 2009년 1.67%의 매우 낮은 채택률에 머물렀다. 또한 보수우익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맞선 시민운동은 일본을 넘어 한일연대, 나아가 동아시아연대로 확대되었다. 새역모에 맞선 시민사회의 활동은 역사인식의 문제를 연구의 영역이 아닌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이끌어냈으며, 또한 시민사회가 정부차원에서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역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도 한일 시민사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성과를 일구어낸 사례이다. 기술한 바와 같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시민연대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시민단체와 연구자, 활동가들이 일제시기 강제연행된 조선인 희생자 및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에 결성한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는 일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강제동원 실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조직을 결성한 첫 사례이다. ‘진상규명네트워크’는 한국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와 더불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한국의 정부위원회와 일본의 시민단체간에 이루어지는 뉴거버넌스적 협력의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구축을 위해 한일 간에 놓여있는 현안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특히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문제에 발단을 둔 한일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고, 이에 현명히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과거사 및 역사인식 문제는 양국이 민족주의적 발상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여 득보다 실이 많은 정치적 선택을 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한국으로서는 ‘경제협력국으로서의 일본’의 위상을 고려하여 ‘청산의 대상으로서의 일본’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한국 대 일본이라는 대결구도를 형성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의 보수우익세력 대 국제사회의 연대라는 대립축을 형성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사안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대처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공동연대라는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매우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이 바로 본고가 주장하는 뉴거버넌스이다. 이제 국가간 관계는 정부간 관계가 아닌 다차원적인 관계이며, 그 중에서도 시민사회 레벨에서의 교류와 연대는 국가간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 레벨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를 통한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순기능이 한일관계에서 제대로 발휘된다면 한일관계는 분명 진전될 것이다.

필자는 본문에서 보수우경화라는 단일한 시각으로 일본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일본 내 과거청산을 위한 활동에 대해 피력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사회 내의 진보적 사회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결집되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다. 그리고 지금은 보수우익의 목소리만 전달하는 미디어에 밀려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한국의 시민세력과의 연대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만 ‘반일’의 눈으로 일본을 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일본 시민사회는 한국 시민사회가 폄하하는 것처럼 ‘죽은 시민의 사회’가 결코 아니다. 필자는 일본 시민사회가 그동안 보여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도덕적 헌신성은 높이 평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청산 작업은 한일이 함께 해나가야만 한다.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전쟁과 식민지배라는 자신들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는 일본 내 양심세력, 진보세력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로서는 일본 우익의 교과서문제와 독도영유권 주장 등으로 인해 일본이 ‘청산되어야 할’ 대상으로 재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보수우경화라는 일본의 상황이 맞물려 한일관계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이를 밝은 전망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한일 시민사회가 더욱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과정에서 역사관이나 민족주의적 기조의 차이점 등은 절제하기도 하고, 유보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성숙함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연대도, 협력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비전을 위해 한일 시민사회가 이제는 민족주의라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찰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讀賣新聞』

김석준(2000).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사.

김영래(2006). “일본 시민사회와 뉴거버넌스 연구.”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제 38집.

김영작(2006). “일본(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영작 · 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김창록(2007a).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법학논고』. 제27집.

김창록(2007b).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 한국인들에 의한 소송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35호.

김호섭(2009). “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제29호.

- 박유하(2005). 『화해를 위해서 : 교과서·위안부·야스쿠니·독도』. 뿌리와이파리.
- 박철희(2008). “한일갈등의 반응적 촉발과 원론적 대응의 구조.”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제2호.
- 신주백(2005). “한국과 일본에서 대일 과거청산운동의 역사 : 한국과 관련하여.” 『역사문제연구』. 제14호.
- 오누마 야스아키 지음·정현숙 옮김(2007). 『일본은 사죄하고 싶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 전략과문화.
- 와다하루키(和田春樹)·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시모무라 미츠코(下村滿子) 공편. 이원웅 역(2001). 『군대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시민운동』. 오름.
- 우즈미 아이코(1997). “일본의 전후처리와 아시아의 보상요구.” 하영선 편. 『한국과 일본』. 나남.
- 유영국(2009). “우드로 문제를 통해 본 한·일 시민사회 연대의 성과와 과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제34집.
- 윤덕민(2005).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한국논단』. 2005년 8월.
- 이계황 외(2003). 『기억의 전쟁-현대 일본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상봉(2006). “제일한인의 전후보상운동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연대의 특징: 일본군위안부 운동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권. 제2호.
- 이원덕(1996).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 일본의 전후처리외교와 한일회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미애(2008).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시민사회의 구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연구』. 제37호.
- 조양현(2007). “동아시아 역사논쟁과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논의 : 최근의 동향과 미일 관계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민족문제연구』. 제12권.
- 최현실(2005).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유엔과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정책변화.” 『동북아연구』.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2010a). 『해방 후 한일간 상호인식과 역사교과서 편찬의 변화』. 경인문화사.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2010b).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경인문화사.
-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2005).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
- Salamon, L. M.(2002).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小林良彰·任赫伯(2004). 『日本と韓国における政治とガバナンス : 変化と持続』. 慶応義塾大學出版會.
- 杉山光信(2001). 『戦後日本の‘市民社會’』. みすず書房.
- 高橋哲哉(2002). 『歴史認識論争』. 作品社.

- 俵義文(2008). 『‘つくる會’分裂と歴史偽造の深層』. 花伝社.
- 服部民夫・金文朝(2005). 『韓國社會と日本社會の変容』. 慶応義塾大學出版會.
- 二谷貞夫(2004). 『21世紀の歴史認識と國際理解：韓國と中國・日本からの提言』. 明石書店.
- 森淳二期(2005). 『東アジアの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アジア太平洋センター研究叢書)中國・韓國・日本における現状と課題』. 九州大學出版會.
- 和田春樹(2003). 『日本・韓國・北朝鮮：東北アジアに生きる』. 青丘文化社.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http://www.jiwon.go.kr>).
-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http://yespeace.tistory.com>).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 프레스이안(<http://www.pressian.com>).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ttp://www.womenandwar.net>).
- 外務省(<http://www.mofa.go.jp>).
- 文部科學省(<http://www.mext.go.jp>).
- 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會(<http://www.tsukurukai.com>).
- 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http://www.awf.or.jp>).
-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http://www.ksyc.jp/sinsou-net/>).
- 子どもと教科書全國ネット21(<http://www.ne.jp/asahi/kyokasho/net21/>).
- 「つくる會」の教科書採擇に反對する杉並親の會(<http://www16.plala.or.jp/kyoukasyo>).
- 杉並の教育を考えるみんなの會(<http://www.suginina.com>).
- 杉並の不当な教科書採擇取り消し裁判の會(<http://suginamisaiiban.web.fc2.com>).
- ナヌムの家/日本軍慰安婦歴史館を応援するページ.
(www.geocities.co.jp/SilkRoad-Ocean/3716/).

Abstract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New Governance in Korea-Japan Relations

Jung, Mi Ae*

After the Liberation, the history of the Korea-Japan relations has moved back and forth, from political antagonism to economic cooperation, and again to tensions concerning understanding history. Although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should maintain their economic cooperation under tripartite alliance led by the United States, understanding history has not been resolved between Korea and Japan. History is not only the memory of the past but also the problem of the present.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role of civil society as the major actor in the Korea-Japan relations under the framework of new governance theory. The premise is that the Korea-Japan relations could be enhanced according to more extensive engagement of civil society on history issues between two countries. Unlike government, which could not change their basic foreign policy doctrines, civil society could be more flexible to make compromises because of its ideal-driven and inform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examines two cases as the successful cases of cooper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civil societies. Firstly, there have been the continuing cooperation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civil society groups for thwarting official adaptations of the right-wing textbooks written by the so-called Tsukurukai (the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In addition, several Korean and Japanese civil society groups have cooperated in order to help the victims by the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ism including “comfort women” who served as sex slaves for Japanese soldiers during World War II.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 argue for the possibility of more desirable Korea-Japan relations throughout the civil societie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 논문 투고일 : 2011년 7월18일, 논문심사일 : 2011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1년 8월 26일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Kookmin University